

광주특별시-교육청-대학, ‘지역책임 교육체계’ 구축

자율·책임성 강화 교육혁신 대전환 공동선언
지역책임 대입전형 개발·전략산업 인재 양성
교육과정 특례 협력...지방시대 교육모델 구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유치원·초·중·고 교육, 대학 교육까지 촘촘하게 이어지는 지역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인 ‘지역책임 교육체계’ 구축에 나선다.

민형배 시장과 김대중 시교육감,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 광주전남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장인 이주희 동신대 총장, 광주전남전문대학총장협의회장인 이호균 목포과학대 총장 등은 19일 광주특별시 광주청사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의 ‘전남광주 지역책임 교육혁신 대전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예로 들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 검토를 주문한 이후 차별화된 대입과 교육 전환 필요성에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교육 대전환 공동선언은 행정통합을 넘어 학교 교육-대학-산업-지역정주가 하나로 연결되는 지역 인재양성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유·초·중·고 교육에서 대학 전학까지 촘촘하고 매력적인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인재

가 모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동선언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40년간 분리되어 있던 전남과 광주의 학교와 대학, 산업과 인재를 하나의 광역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지역 학생들이 지역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공동 책임지는 교육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학교에서 미래 역량을 기른 학생들이 지역대학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역책임 대입전형’을 함께 연구·개발하기 위한 공동 개발기구를 설치한다.

도입 시기는 2027학년도 대입전형은 이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보고돼 있어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만큼, 2028학년도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지역인재전형의 대상과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학과의 정원을 늘려 지역 학생들이 지역대학에서 역량을 키우고 지역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반도체를 비롯한 지역전략산업의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외 대입전형 관련



19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왼쪽부터)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이주희 동신대학교 총장,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 이호균 목포과학대학교 총장이 ‘전남광주 지역책임 교육 대전환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규제 해소를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공동 건의하고, 학교교육에서 지역산업 현장까지 이어지는 ‘교육 자산지소(地産地消)’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과정에서도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공동선언에 참여한 5개 대입기관은 서·술술형 평가와 절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전남광주형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특례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획일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여건과 학생의 미래역량에 맞는 교육모델을 단계적으로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교육청은 지역 책임 교육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지역 간, 학생 간 형평성을 지키며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이는 지역의 교육 자율성을 확대하되,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증을 거쳐 지역에 적합한 교육 대전환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지방정부·교육청·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책임 대입전형과 교육과정 특례, 지역인재전형 확대, 전략산업 인재양성 등 후속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정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대입전형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전국 최초로 광역 통합을 이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이를 선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통합특별시와 교육청, 지역대학들이 신중하고 충분히 숙의해, 지역 학생들이 지역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인재양성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광주 반도체 투자, ‘메가클러스터’로 키워야

정부가 서남권에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 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규모 투자를 전남광주의 실질적인 성장동력으로 연결하려면 메가밸 유치를 넘어 연관 산업 육성과 첨단도시 조성, 권역별 분업을 아우르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남연구원은 19일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로 바뀌는 전남광주 미래 경제상’을 주제로 한 ‘JN1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정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지역경제 변화와 지속 가능한 반도체산업 성장 거점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구상을 토대로 전남광주에 들어설 반도체 생산거점과 연관산업 생태계, 기업형 첨단도시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은 개념이다.

리포트는 반도체 메가밸과 패키징 시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에 공공·민간 투자가 집중되면서 서남권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단계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면 서남권에

전남연구원, 연매출 100조원·직접고용 2만명 전망

광주 메가밸·동부 화학소재·서남 전력반도체 연계

서 연간 100조원 규모의 반도체 매출과 2만명의 직접고용이 발생하고, 근로자와 가족 등 정주인구 10만명 규모의 기업형 첨단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산업이 지역경제의 성장물을 끌어올리는 새로운 축이 될 가능성도 제시했다.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반영할 경우 2024~2045년 전남광주의 연평균 실질성장률은 최근 10년 평균인 1.75%에서 2.84~3.16%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석유화학과 철강,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과 에너지·바이오·우주항공 등 미래산업에 반도체가 더해지면서 지역 산업구조도 한층 다변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지역경제에 편입해 특정 산업의 경기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보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남연구원은 대규모 생산시설 유치만으로는 반도체 투자의 효과를 지역에 온전히 남기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산업 생태계 구축 초기부터 생산된 부가가치와 소득이 지역에서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자와 가족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는 직주일치형 기업 도시를 조성하고 주거와 교육, 의료, 문화 등 생활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산업에서 발생한 임금소득이 역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소비와 투자적인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내생적 경제생태계 구축도 강조했다.

권역별 산업 기반을 연결한 ‘반도체 트라이앵글’ 조성 방안도 제시했다. 광주권은 메가밸을 중심으로 생산기능을

담당하고 동부권은 스페셜티 화학소재, 서남권은 전력반도체를 특화해 권역 간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구상이다.

동부권에서는 기존 정밀화학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반도체산업 전환과 공정 실증을 지원해 후방산업을 집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남권은 분산에 나지 특화지역과 에너지밸리를 전력반도체 산업과 연결하고 반도체 설비·장비·부품의 수리와 유지보수를 담당할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산업의 경기변동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봤다. 호황기에 발생한 지방재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지역경제 안정화기금’을 조성에 불합기 고용과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반도체 매출 대비 역대 부가가치율과 임금소득의 역대 소비 전환율, 역대 조달률을 3대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반기마다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국가폭력 안식처가 될 수도, 되어서도 안돼”

조계원, 서훈취소 국가폭력가해자 국립묘지서 이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광주 여수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진)은 상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이후 서훈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유족에게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군형법 상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등 일정한 경우에만 국립묘지 안장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재심 무죄 판결 등을 토대로 12·12 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 간첩조작 및 고문 사건



등에 관여한 국가폭력 가해자 167명에 대한 정부포상 198건을 취소했다.

그런데 서훈 취소 자체는 국립묘지 안장 제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폭력 가해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거나 계속 안장될 수 있는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훈법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이후 서훈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유족에게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을 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 국립의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1면에서 통합특별시는 지난 11일 두 대학에 공문을 보내 교육부 서식과 작성 방법을 따르되 통계자료는 옛 전남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요청했다. 대학이 제출할 필수 항목으로는 △의대 신설 필요성 △신설 정원 규모 △지자체 지원계획 등 3개를 제시했다.

두 대학은 지난 18일 각각 계획서를 제출했다. 목표대는 의대 소재지를 특정하지 않고 신설 필요성과 정원 규모 등을 중심으로 계획서를 작성했다. 반면 순천대는 교육부 서식에 제시된 9개 항목을 모두 작성하면서 의대와 대학병원을 순천에 설치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통합특별시는 순천대 계획서가 두 대학의 통합 합의에 따른 공동안이 아닌 데다 당초 요구한 제출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해 반려했다. 두 대학이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순천대의 단독 입지안을 특별히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순천대는 통합특별시의 요청에 따라 19일 의대 신설 필요성과 신청 정원 규모, 지자체 지원계획 등 필수 3개 항목만

답은 계획서를 다시 제출했다. 당초 계획서에 포함했던 의대와 대학병원의 순천 설치 방안은 재제출 자료에서 제외했다.

순천대가 계획서를 수정해 제출했지만 이는 대학의 의견 제출 범위를 조정한 것일 뿐, 두 대학의 통합과 의대 소재지를 둘러싼 의견은 해소되지 않았다. 통합특별시는 신청 마감 이후 교육부와 협의해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현행 국립의대 추진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당장 목표대나 순천대의 단독 신청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대학 통합 여부와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을 분리해 판단해 달라라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대학 간 합의와 별개로 전남광주의 열악한 의료 현실과 국립의대 설립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2030학년도 지역 외대 신입생 정원으로 100명을 배정했다. 신설 후보 지역으로는 국립경국대 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경북과 옛 전남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1면 ‘삼성전자 광주’서 계속

이를 위해 ‘플랫폼 투자지원 전담팀(TF)’을 구성해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공조기 제조부터 부품·장비까지 이어지는 지역 공조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민형배 광주특별시장은 “전남광주에서 AI·반도체 산업의 큰 축들이 연결되며 지역민들의 삶을 꾸려갈 일자리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광주공장이 글로벌 공조시장의 핵심 생산기지로 성장하도록 특별 시도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철기 삼성전자 DA사업부장(부사장)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지역 협력사와의 상생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며 “전남광주가 글로벌 공조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특별시 “옛 광주 채무 전남에 전가 없어”

재정혁신TF 가동...기존 상환계획 따라 차질 없이 상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통합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19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2025년 결산 기준 채무는 옛 전남도 1조4261억원과 옛 광주시 2조2253억원을 합한 총 3조6514억원으로, 통합 전 옛 광주시 기준 25.61%였던 채무비율은 통합 이후 전체 기준 16.25%로 낮아졌다.

통합 이후 채무비율 하락은 양 시·도의 채무와 재정 규모가 합산된 결과다.

이에 광주특별시는 기존 채무의 발행 목적, 잔액, 연도별 상환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옛 광주시의 채무는 2023년부터 2025

년까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경기 둔화로 세입이 감소한 반면 사회복지 수요, 법정·의무적 경비, 대규모 투자사업 등 필수 세출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늘었다.

채무의 상당 부분은 도시철도 2호선과 장기미집행공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투입된 것으로, 통합 후 채무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조성된 도시철도·공원·도로 등 공공자산도 광주특별시에 함께 승계된다.

이들 기반시설은 시민의 이동 편의와 생활환경 개선 등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공공자산으로 활용된다는 측면서 투자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것.

통합으로 전체 채무 규모와 상환액이 커졌지만, 양 시·도의 세입과 세출도 하나의 재정체제로 통합되면서 채무비율과 지방채 발행한도 역시 광주특별시의 전체 재정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되게 됐다.

옛 광주시의 채무는 지방채 발행 당시 수립한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되므로, 통합을 이유로 상환 시기를 앞당기거나 옛 전남도의 예산을 별도로 줄여 갚는 구조가 아니라는 게 특별시 설명이다.

광주특별시는 ‘재정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국비와 통합재정 인센티브 확보, 지출 구조조정, 내년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윤리 지방세 징수와 체납관리를 강화해 자체 세입을 확충하고, 지방교부세 범정률 인상 등 국가 재정지원 확대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